

## “충간소음 해소, 불합리한 자동차세 개선...”

### 대전환선대위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 통해 선정한 우수 공약은?

-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에 3주간 정책제안 6,305건 몰려... 대전환선대위 정책본부 전수 검토
- △미성년자 빛 대물림 방지 △충간소음 문제 해소 △불합리한 자동차세 제도개선 △줄음쉼터 태양광패널 그늘막 설치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 확대 등 우수 제안 5건 선정돼
- 이재명, “작은 변화 많이 만드는 것이 곧 큰 변화 만드는 것” 국민체감형 정책 중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대전환선대위는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을 통해 5건의 우수 제안을 공약으로 선정했다.

선대위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김남국 온라인소통단장은 28일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 결과를 발표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직접 정책본부에 제안한 공약 방식으로, 작지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국민체감형·생활밀착형 공약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자는 취지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7일까지 총 54건의 소확행 공약을 내놓았다.

선대위는 국민체감형·생활밀착형이라는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약 3주간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재명 플러스’ 모바일 앱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확행 공약을 제안받은 결과, 총 6,30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제안받은 정책 중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비중이 24.7%로 가장 높았고, 행정·안전 및 균형발전 분야가 13.2%, 청년과 성평등 관련 분야가 9.5%로 그 뒤를 이었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접수된 모든 제안을 검토해 △미성년자 빛 대물림 방지, △충간소음 문제 해소, △불합리한 자동차세 제도개선, △줄음쉼터 태양광패널 그늘막 설치,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 확대 등 우수 제안 5건을 선정했다.

‘pic\*\*\*’ 제안자는 “누구는 한정승인하고 누구는 상속포기하고,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 생소하다” 고 지적하며 미성년 상속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제안에 대해 즉시 공약화에 착수해 지난 10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를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했다. 실제 미성년 상속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나의 아저씨’ 와 유사해 이른바 ‘나의아저씨법’ 공약으로 화제된 바 있다.

‘lys\*\*\*’ 제안자의 ‘층간소음 문제 해소’ 제안은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 도입, △층간소음 관리기준 재정비, △현장진단 서비스 강화, △이웃 간 갈등 시 긴급출동 중재 서비스 도입 등의 세부 공약으로 구체화됐다.

‘boy\*\*\*’ 제안자의 ‘불합리한 자동차세 제도개선’ 제안은 고가의 수입차와 저렴한 국산차 간 세금에 차등이 없다는 지적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른바 조세의 역진성 문제다. 이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과세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공약화 중이다.

‘고속도로 줄음선평터 그늘막 설치’ 는 ‘nv-\*\*\*’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반영, 태양광 발전패널을 고속도로 줄음선평터의 그늘막으로 활용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도록 공약을 설계했다.

끝으로 joo\*\*\* 제안자의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 확대’ 는 국공립유치원의 통원버스를 증차하는 것에 더하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저학년까지 통원버스를 이용하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약이 발전됐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위 제안자들에 각별한 감사를 전하며 “공개한 5건의 우수 제안 외에도 10여 건을 추가로 선정해 공약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 기자회견에서 “작은 변화를 많이 만드는 것이 곧 큰 변화를 만드는 것” 이라며 “정치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사고로 대전환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해결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길” 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치인 한 명이 잘하는 것보다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께서 스스로와 사회 전체를 위해 문제를 제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주권국가, 민주공화국”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끝)

문의: 정책본부 02-2630-0004